

## ‘매일등교’ 특수학급 방역 부실 안전 우려... “인력 보강 절실”

### 특수학급 6명 포화... “교구 많아 거리두기 어려워” “마스크 벗거나 이상행동시 수업 중단되기 일쑤”

지난 19일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방역 강화를 전제로 매일등교 원칙이 적용됐지만 발달장애 학생들은 방역수칙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워지고 지원인력도 부족해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이 건강하게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특수학급을 지원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랑구 한 초교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A교사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등교학대 이전에는 학년별로 총 3명이 등교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5~6명이 오면서 어렵게 됐다”며

아무리 거리두기를 하려 해도 교실 안에 교구가 많고 공간이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A교사는 “학생 한 명 한 명 마주 앉아 학습을 도와주다보면 저와 가장 멀리 떨어진 학생이 마스크를 벗기도 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며 “(그때마다) 마스크를 다시 씌워 주느라 수업이 중단되기 일쑤”라고 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이 넘으면 2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A교사가 맡은 이 초교 1~3학년 학급에는 6명이 있으며, 다른 교사가 맡은 4~6학년 학급은 3명이 다닌다.

이 학교 특수학급 지원 인력은

코로나19 이전과 똑같이 사회복지무원 1명과 특수교육실무사 1명이 전부다. A교사는 “학생 9명 중 4명은 중증장애가 있어 이동할 때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데 2명으론 부족하다”고 말했다.

일반초교 특수학급은 통상 1~3학년, 4~6학년 식으로 다수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복식학급’으로 운영된다. 등교수업이 확대된 후 일선 학교는 거리두기를 위해 학년마다 등교 및 급식, 하교시간을 제각각 편성한 경우가 잦다.

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집행위원장(경기 장기초 교사)은 “수업을 하면서 교사들은 얼굴 가림막(페이스시ールド), 실리온 장갑을 착용한 채 수업을 하고 있으나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있게 하는 것도 어렵다”며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등교를 확대하라는 교육부 방침이 지켜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표를 학년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수학급은 통상 복식학급”이라며 “1, 2학년은 오전 9시, 6학년은 8시50분에 시작하는데 수업시간을 그때마다 맞출 수도 없고 오전과 쉬는 시간에 교실을 소독할 시간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전국 학교의 등교인원 제한을 3분의 2로 확대하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시 강화된 방역을 전제로 등교할 수 있게 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원격교육 시기, 장애 학생의 돌봄 및 교육을 오히려 책임져야 하는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매우 크다”면서도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이 장애 학생의 일과를 전부 책임지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확대 이전 일반초교 특수학급 학



등교수업 확대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한국경건학교를 방문해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을 유초·중 1/3(고교 2/3)에서 2/3이하로 완화해 격용했다.

생들의 원격수업도, 긴급돌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학교는 긴급돌봄이 비교적 잘 이뤄졌는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확인한 결과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며 온라인 교육 지원도 불충분했다”고 참고인 출석한 학부모에게 사과한 바 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등교학대 이후에도 안전을 담보하면서 수업을 내실화하려면 지원인력 보강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 ‘장애등급제 폐지’ 전용 주차구역 등 이동지원 ‘맞춤형’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확대 2단계로 이동지원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 필요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단계로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 종합조사를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2단계로 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

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로서 중장애 중증 지적장애인이거나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데도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기동취재본부

## 장흥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 심리지원 이동상담실 운영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격리자 대상 정신건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격리로 인해 주변피해 두려움 82.8%, 격리로 인한 비난의 두려움 61.2%, 스트레스 고위험군 65.5%, 우울한 상태 44.8%, 불안 호소 33.3%의 검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동취재본부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달 12일 장흥읍 5일시장, 13일 관산읍 5일시장, 16일 회진면 5일시장 총 3차례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진행하며 우울증검사는 10월 5일~30일까지 QR코드를 이용해온라인(<https://forms.gle/5YacJFLZh3Txsppv6>) 우울증 선별검사도 시행하고 있다.

## 목포시, 저출산 극복 난임 부부 적극 지원

목포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난임 검진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를 지원한다.

시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948

로 떨어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목포시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가 완료된 부부 중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이며 지원내용은 난임 시술비 지원 최대 90만원, 난임 진단 검진비 최대 30만원, 난관 복원 수술비 최대 100만원, 정관 복원 수술비 최대 50만원까지로 수술 전 검사비용과 수술 후 약제비까지 지원한다.

목포=박정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사람이 비우면 자연은 채웁니다

사람의 손길이 멈춘 자리에 나비가 날아들고 새들이 지저귀니.  
사람의 발길이 잦아든 자리에 푸른 열매가 자라고 붉은 꽃이 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푸른 세상을 꿈꿉니다.